

# 한숨 돌린 국민의당 “힘 모으자” 전열 정비

### 박선숙·김수민 영장 기각에 현안·정책 집중 다짐

### 새누리 홍보비리 강력 대응...안철수 위상 회복 나서

4·13 총선 홍보비 파문의 당사자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되면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국민의당은 일단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현역 국회의원 2명의 동반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9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한 달 동안의 위기극면에서 한 발 빠져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당이 입은 상처가 상당하고 검찰의 기소와 재판 등 남은 절차가 ‘산 너머 산’이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탈피한 만큼 당 재건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했다는 관측이다.

안 전 대표로서 최측근이었던 박 의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의 피의자로 전락, 만만치 않은 내상을 입었지만 이를 딛고 재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따가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당은 공식 논평 등에서도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피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기를 바라며, 당은 남은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홍보비 파문의 블랙홀’에 빠지면서 흐트러졌던 대의동력을 정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공짜 홍보 동영상 수령 의혹을 대하는 검찰과 중앙선관위의 태도와 관련, 국민의당과의 협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론전에도 나설 전망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무리한 감압 조사에서도 정당하게 맞섰고 검찰 수사에도 협력하면서 강한 저항도 했다”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국민에게 겸손했다”고 톤을 낮췄다.

그는 이어 “이제 보다 겸손한 자세로 정치와 정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또다시 단결하자고 제안한다. 국민의당이 사는 길은 오로지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표직 사퇴 카드는 조강수로 배수의 진을 쳤던 안 전 대표는 당분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장 기각에 대한 질문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홍보비 파동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껴온 것에 비춰볼 때 안 전 대표가 마음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낸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번 홍보비 파동으로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의 새정치 이미지가 퇴색되고 지지율도 하락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공’ 국민의당 사드 배치 ‘혼선’ 더민주

### ‘철회·국회 동의 요구’ 당론 채택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결정과 관련, 국민의당이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강공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2일에도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배치 반대와 한미 당국의 배치 결정 철회 촉구, 향후 배치시 국회 동의 요구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군 장성 출신의 김중로 의원은 “(스스로) 보수로 생각하는데, 사드는 양심을 걸고 반대해왔다”며 “안보적·경제적 리스크가 대단히 크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의원은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유력 후보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전자파 발생으로 환경·건강 문제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가 배치시 방위분담금 추가 가능성이 생기고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동북아 국제정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에서 토지수용, 예산삭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유성엽 의원은 “무조건 반대,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는 혼선만 거듭하고 있다.

### 반대론 우세에 당론 결정 못해

김종민 비상대책위 대표가 ‘한미동맹 등을 감안, 찬반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내놓으면서 당 지도부가 “반대하진 않는다”는 기조로 초기에 대응했지만, 당 안팎에서 들끓는 강경기류로 인해 백에 부딪혔다.

차기 당권주자인 추미애·송영길 의원 모두 사드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노선으로 당의 좌표가 다시 원점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더민주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열고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45분가

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두 24명이 발언을 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전라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는 점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며 “많은 분들은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결국,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채 간담회는 끝났다. 기 원내대변인은 “원내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배론 시간 내에 방안을 밝혀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세균 의장 “방탄국회는 없다”

### 취임 한달...내주초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발족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주 초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한달을 맞은 정 의장은 지난 11일 “지금 여야에서 위원들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다”며 “내주 초에는 기구 발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체포특권은 없애야 한다”며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찬반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미리 좀 의논을 해야 하는데, 나한테도 연락이 없었다”며 “국방위원장한테도 연락이 안 가고, 발표하기 직전 누군가가 3당 원내대표한테만 설명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권이 좀더 성의있게 국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

관계 당사국들과 더 진정성 있고 성의있게 협의해서 국민이 걱정 안 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 의장은 “내가 얘기할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을 아꼈다.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내 이견과 관련, “일하기 위해서는 항상 국회를 열 수 있다”면서도 “20대 국회에서 방탄국회는 없다”고 뉘그러기를 밝혔다.

20대 국회 들어 개헌론을 재점화시킨 정 의장이 오는 17일 재연설 개헌과 관련,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정 의장은 취임 한달 소회와 관련, 가장 보람된 일로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을 꼽았다. /연합뉴스

## 여 “표적수사 우려”...야 “공직 풍토 일신”

### 법사위, 김영란법 논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놓고 의원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공무원이나 기자가 친분이 있는 사람과 식사하고 그가 식대를 납부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며 “해당 기자나 공무원이 연간 300만원 이상 먹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손 봐야 하는 공직자 기자를 표적수사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병계 의원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언론이 엄청나게 시끄러웠지만 결론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현재의 법”이라며 “여러 부작용도 있었지만 한국은 부패 공화국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나라”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패를 감시해야 할 감시자들도 부패의 늪에 빠져 있다. 이는 법원과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며 “김영란법을 공직 풍토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란법 위원 여부를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 측에 법 시행 전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김용현 현재 사무차장은 “재판관들 사이에 시행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더민주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으로 서삼석 전 무안군수를 단수 추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전 군수는 4·13 총선에서 이 지역에 출마했다가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게 패했다.

비대위는 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에서는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승남 전 의원과 지난 4·13 총선에서 더민주 후보로 이 지역에 출마한 신문식 전 의원이 경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무소속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가 걸려있는 세종시와 강원 춘천의

지역위원회를 사고 위원회로 확정해 공식으로 뒀다.

한편, 비대위는 8·27 전국대의원대회와 관련해 선출대

위원의 총 규모를 1만99명으로 하면서 253개 지역위원회에 30명씩 배정하고, 인구 10만명을 초과할 경우 1만명 당 1명씩 추가 배정으로 결정했다. 전대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당원은 지난 1월 15일까지 입당했으며,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지난 7월 15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경우로 한정했다. /최권일기자 cki@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